

News

다음달 한미 금리 역전된다... 한은, 빅스텝 카드 '만지작'

머니S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스텝에 한국은행 금통위도 다음달 금리를 한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 나설 가능성 높아져...현재까지 빅스텝에 나선 적은 전무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뿐만 아니라 국내 물가 계속 치솟는 점도 빅스텝 가능성에 힘실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4% 상승해 최고치 기록

가계부채 시한폭탄... 정부, 대출상환기간 5년 확대·30조 채무조정 지원

조선비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차주들이 유예 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계획 수립한다 밝혀...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다음달부터 총 8조 7,000억 규모로 보증 및 융자 공급...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오늘 10월부터 30조원 규모로 운영

4월 은행 대출 연체율 0.23%... 소폭 올라

디지털타임스

지난 4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3%로 전월대비 0.02%p 상승... 신규연체 발생액은 9,000억원으로 전월비 1,000억원 증가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0.01%p 상승한 0.18%로 조사... 주택대 연체율은 전월말대비 0.01%p 상승... 주택대 제외 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전월말대비 0.04%p 상승

우리금융지주, 우리PE운용에 500억 출자 결정

뉴시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에 500억원 출자 결정...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출자 취득주식수는 1,000만주이며 취득금액은 연결 기준 작년 자기자본의 0.17% 규모...사측은 자회사 자본확충을 통한 사업 기회 확대 마련 차원으로 설명

실손보험료 또 올립니다... 10% 인상에 입 맞추는 보험사들

머니S

손보사들, 지난 주 손해보험협회에 3세대 실손보험료를 최대 10%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 전달... 당국 지시로 손실 발생해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으로 만회해야 한다는 입장 국내 5대 손보사의 4세대 실손보험 누적 가입자는 약 72만명으로 집계... 이르면 3분기 실손보험료 인상을 통해 손실 만회해야 한다고 나서는 중

생보협회 "의료비 부담 매년 증가...질병보험으로 대비해야"

아시아경제

생보협회, 점차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며 다양한 유형의 질병보험 상품 내놓고 있다고 분석...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8.7% 주요 선진국 대비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결국 가계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입장... 의료비 부담 줄일 수 있는 보험상품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

2년 뒤 판단 금투세 도입 불투명...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추진

이데일리

정부,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한다는 입장... 금투세는 유예하면서 유지되는 대주주 양도세는 과세 대상을 완화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0.20% 내려... 유예 2년 후에는 도입 여부를 시장 상황 봐서 결정할 것이라 언급

증시 폭락하자...반대매매 1달 만에 최고치 기록

한국경제

지난 14일 기준 반대매매 금액은 260억 3,400만원으로 지난 2월 15일 이후 최대 규모...전체 미수거래 금액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약 10.2% 최근 증시가 약세 보임에도 미수거래 늘어난 점도 원인... 기술적 반등을 노린 투자자들 증가한 것으로 분석... 추가하락 가능성도 염두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